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019-10000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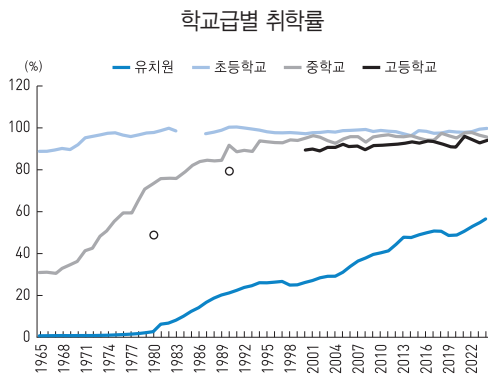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해방 후 ~ 1960년대	1970년대 ~ 1980년대	1990년대 ~ 2000년대	2010년대 ~ 현재
문맹 퇴치 초등의무교육	교육 기회 확대 중등교육 보편화	교육 여건 개선 고등교육 대중화	학령인구 감소 교육의 디지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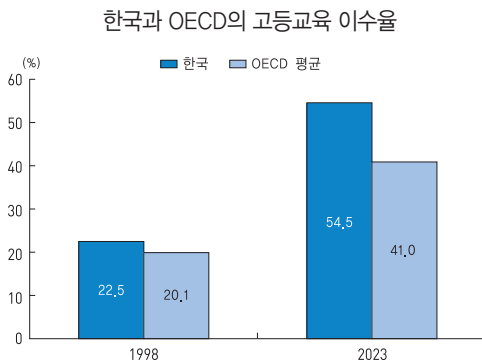
[시대별 주요 특징]

- (해방 후~1960년대) 전쟁 후 교육 재건을 위해 문맹 퇴치와 초등교육 의무화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1970년에 비문해율은 7.0%까지 감소하고 초등학교 취학률은 92.0%까지 상승하였다.
- (1970년대~1980년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1969년)와 고등학교 평준화(1974년) 정책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도 취학률은 초등학교 100.5%, 중학교 91.6%, 고등학교 79.4%를 기록하였다.
- (1990년대~2000년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정책 등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힘썼으며, 동시에 고등교육 진입이 가속화되며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에 83.8%에 달했다.
- (2010년대~현재) 출산율 감소에 따른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으며, 동시에 고등교육 보편화로 인해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2023년에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 문해력 4수준 이상 비율은 8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대수는 2021년 247만 대에서 2022년 295만 대, 2023년 424만 대로 2년 사이에 보급 규모가 약 1.7배 확대되었다.

[주요 지표]



주: 출처, 정의 등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일본 식민지 체제와 한국전쟁 직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한국은 광복 이후 괄목할 만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현재는 명실공히 선진 경제 국가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이종재 외, 2009; United Nations, 2024). 이와 같은 한국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전 모델 사례로 평가받으며, 그 중심에서 교육·훈련은 국가 경제발전의 밑거름인 인적자원 개발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종재 외, 2009).

여기에서는 주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광복 이후 한국의 교육·훈련 영역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 한국 교육·훈련 체제의 변화 흐름을 해석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맥락과 광복 이후 국가 성장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단, 국가 수준의 교육 통계가 공식적으로 기록·축적되어 온 것은 1950년대 「교육통계연보」 발간 이후부터이고, 전산화된 형태의 자료가 존재하는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인 실정이다. 이에, 지표별로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광복 이후 한국의 상황을 묘사하였으며, 그 이전 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문헌을 참조하였다. 이 글은 지표의 성격에 따라 교육·훈련의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교육·훈련의 투입

교육·훈련 투입 지표를 통해 교육·훈련 체제에 시설 인프라, 학생, 교원, 재정 등의 자원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6-3-3-4의 학제가 형성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학교 시설의 85%가 파괴된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체제를 재건하는 데 주력했다(이종재 외, 2009). 또한, 1953년 휴전 이후에는 「초등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무교육 단계(당시 초등교육까지)의 취학률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이종재 외, 2009). 이후 교육·훈련 체제의 발전 상황은 1965년부터 존재하는 국가교육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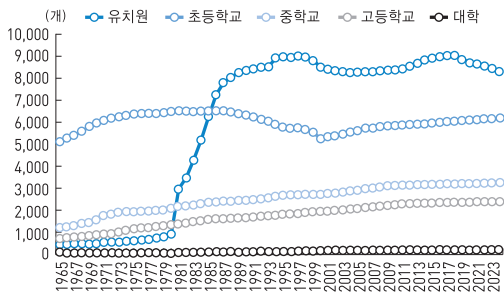
교육 여건

먼저 [그림 IV-1]에 제시된 1965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급별¹⁾ 학교 수를 살펴보면, 모든 교육단계의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정체 또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유치원은 1965년 423개에서 출발해 1997년 9,005까지 증가한 뒤 이후 증감을 반복했다. 이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등과 같은 1980년대 초 추진된 유아교육 진흥 정책의 영향을 반영한다. 초등학교는 1986년에 6,535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및 유지 추세로 전환되어 2024년 현재 6,183개 수준이다. 중학교는 1965년 1,208개에서 2024년

1) 유아교육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교육 단계가 아니며 공공성, 보편성 측면에서 공교육의 성격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등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측면도 있어 여기에서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과 함께 다루었다.

3,272개로, 고등학교는 701개에서 2,380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1960~1980년대의 교육 기회 확대와 정책 변화(의무교육 확대, 중학교 무시험 제도, 고교 평준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은 1965년 70개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뒤 이후 유지되어 2024년에는 189개를 기록하였다.

[그림 IV-1] 학교급별 학교 수, 196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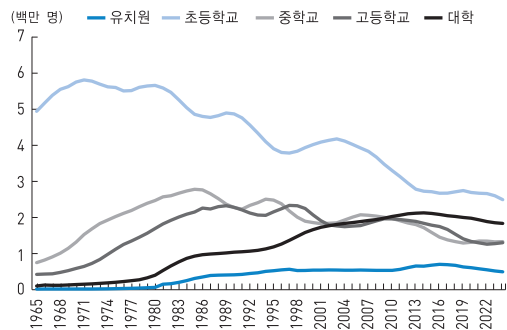


주: 1)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수는 신설교, 기존교, 휴교 포함(폐교 및 분교 제외)
 2) 대학의 경우, 폐교 및 분교, 캠퍼스는 학교 수에서 제외됨.
 3) 특별법 및 타 부처 설립에 근거한 대학 현황이 2022년부터 정식 조사 되어 학교 수에 포함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다음으로 [그림 IV-2]에 제시된 1965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급별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단계별로 다소 다른 증감 양상이 보인다. 유치원은 1965년 1만 9,566명에서 2016년에 70만 4,13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49만 8,604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71년에 580만 7,44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해 2024년에는 249만 5,005명으로 절반 이상

이하로 줄어들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세는 출산율 저하와 이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반영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는 각각 1985년(278만 2,173명), 1997년(233만 6,725명)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했으며, 2024년 기준 중학생은 133만 2,850명, 고등학생은 130만 4,325명으로 나타나 고교 단계까지의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학생 수는 1965년 10만 5,643명에서 2014년 213만여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1990년대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대학 진학률 증가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후 입학 자원 감소 등으로 인해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4년 현재는 183만 6,625명 수준이다.

[그림 IV-2] 학교급별 학생 수, 1965-2024



주: 1) 대학의 경우 폐교의 잔류 재적학생 수가 포함됨.
 2) 특별법 및 타 부처 설립에 근거한 대학 현황이 2011년부터 정식 조사 되어 학생 수에 포함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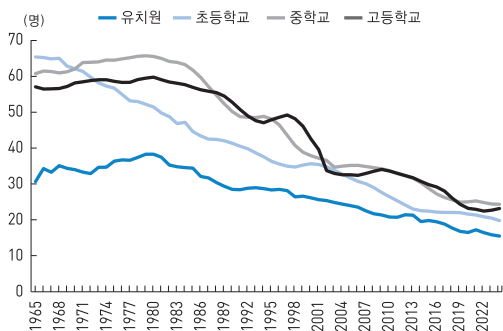
1980년대까지의 양적 성장에 이어 이후 1990년대까지 학습자 중심 교육, 학교 운영의 자율, 교



육 정보화 등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질적 변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예: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5·31 교육개혁안), 1995」,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2001」 등)이 이어졌다(이종재 외, 2009).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지표가 있다. 학급당 학생 수 지표는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학생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그림 IV-3]에 제시된 1965년부터 2024년까지의 학급당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제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다. 유치원의 경우 1979년 38.4명에서 2024년 15.7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가 입학하기 시작한 1960~1970년대에는

[그림 IV-3]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196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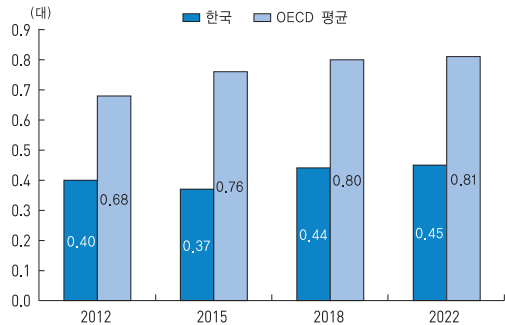
주: 1) 학급당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를 전체 학급 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2) 2021년부터 학급 수는 편성학급 기준으로 변경(2020년까지는 인가 학급 기준)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학급당 학생 수가 50~60명대에 달하며 2부제 수업(오전/오후반)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학생 수 감소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35.8명, 2024년에는 20.0명으로 감소했다. 중학교 역시 1965년 60.7명에서 2024년 24.5명으로 감소했으며, 고등학교도 같은 기간 57.1명에서 23.4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IV-4]에 제시된 학생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컴퓨터의 수는 교육 현장의 ICT 인프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지표는 한국과 OECD 평균 모두에서 증가했으나, 한국은 줄곧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학생 1인당 컴퓨터 수는 2012년 0.40대에서 2015년 0.37대로 소폭 감소한 뒤, 2018년 0.44대, 2022년에는 0.45대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완만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그림 IV-4] 한국과 OECD의 학생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컴퓨터 수,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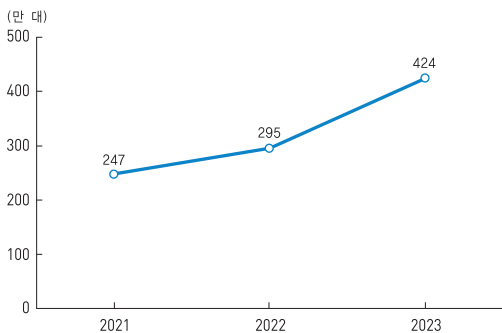


출처: OECD, PISA, 각 연도.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0.68대(2012년)에서 0.81대(2022년)로 증가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꾸준히 유지 또는 확대해 왔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정책(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2023」 등)이 추진되며, 한국 교육 현장에서 ICT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IV-5]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초·중등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대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247만 대에서 2022년 295만 대로 약 48만 대가 늘었으며, 2023년에는 424만 대로 전년 대비 43.6% 급증하였다. 2년 사이에 보급 규모가 약 1.7배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5] 초·중등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대수, 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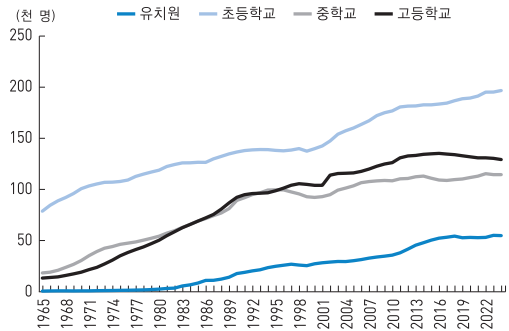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전환 실태 조사」, 각 연도.

인적자원

교육·훈련 투입의 주요 요소로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교사가 있다. [그림 IV-6]의 학교급

별 교원 수 통계를 살펴보면, 1965년 이후 유·초·중등 단계 모두에서 장기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유치원 교원 수는 1965년 1,402명에서 2024년 5만 5,404명으로 약 40배 증가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65년 7만 9,16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19만 6,598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중학교 교원 수는 1965년 1만 9,067명에서 2024년 11만 4,780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늘어난 뒤 최근에는 다소 정체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원 수는 1965년 1만 4,108명에서 2024년 12만 9,436명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 13만 5,427명을 정점으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그림 IV-6] 학교급별 교원 수, 1965-2024



주: 1) 교원에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 교원 및 강사는 제외됨(단, 후직 교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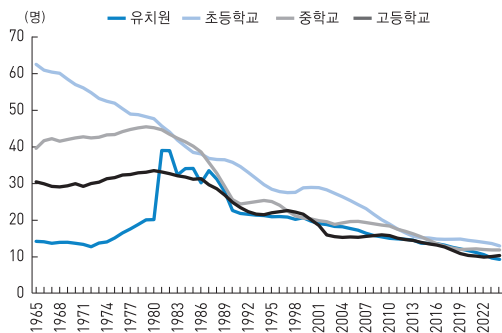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교원 수의 확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지표에 서로 드러난다. 이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와 함께 국가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기



도 하다. [그림 IV-7]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교사 확충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노력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는 1965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62.4명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24년에는 12.7명으로 줄었다. 중학교도 같은 기간 39.4명에서 11.6명으로 감소했으며, 고등학교 역시 30.2명에서 10.1명으로 줄어들었다. 유치원은 1981~1982년에 1인당 학생 수가 38.8명까지 급증하는 이례적 양상을 보였지만 이후 안정화되어 2024년에는 9.0명을 기록하였다.

[그림 IV-7]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1965-2024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를 전체 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2) 교원에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 교원 및 강사는 제외됨(단, 휴직 교원 포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교육재정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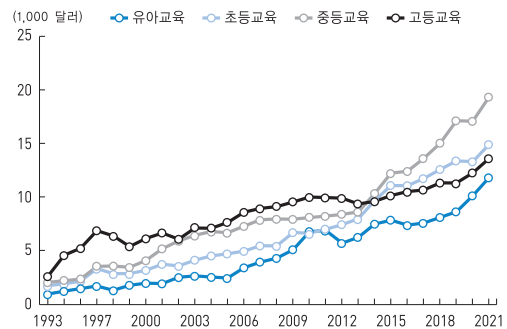
교육·훈련 투입의 대표적인 요소인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자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월평균 사교육비 지표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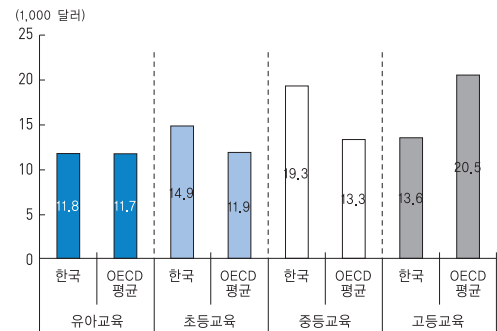
[그림 IV-8]에 제시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그림 IV-8] 한국과 OECD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93-2021

1) 대한민국, 1993-2021



2) 대한민국·OECD,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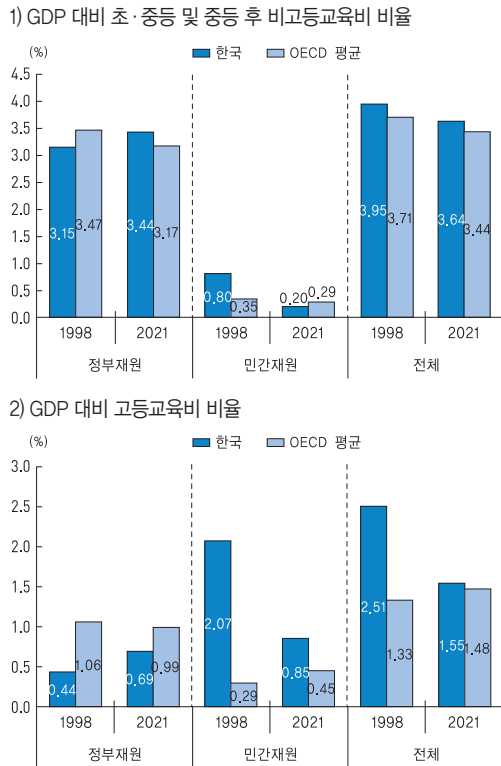
주: 1) 2015년(EAG 2018 수록)부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 기준 및 산출식이 변경됨.
 - 기존 산출식: ((경상지출+자본적 지출)/학생 수)/PPP
 - 신규 산출식: ((정부·민간·해외 재원 교육기관 직접 지출)/학생 수)/PPP
 2) 2015년(EAG 2018 수록)부터 한국 자료의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 중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이 제외되었으며, 2016년(EAG 2019 수록)부터 모든 교육단계에서 제외됨.
 3) 2014년(EAG 2017 수록)부터 한국 자료의 교육단계 미분류 프로그램 지출액(주로 행정기관 지출)을 각 교육단계에 포함하여 공교육비를 산출함.
 4) 2009년(EAG 2012 수록) 한국 자료는 Erratum에 올린 수정된 자료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대부분의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거나 일부 단계에서는 OECD 평균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서는 괄목할 만한 증가 폭이 확인된다. 유아교육은 1993년 935달러에서 2021년 11,792달러로 약 12.6배 증가하며, 2021년에는 최초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초등교육도 1993년 1,715달러에서 2021년 14,873달러로 상승했으며, 2014년부터는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OECD 평균(11,902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중등교육은 1993년 2,026달러에서 2021년 19,299달러로 약 9.5배 증가하여 OECD 평균(13,324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투자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고등교육은 1993년 2,589달러에서 2021년 13,573달러로 증가했으나, OECD 평균(20,499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며 격차가 가장 큰 단계로 남아 있다.

[그림 IV-9]에는 1998년과 2021년의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한국의 공교육비 재원 구성은 초·중등 및 중등 후 비고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에서 민간재원 비중이 감소하고 정부재원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초·중등 및 중등 후 비고등교육에서 한국의 정부재원은 GDP 대비 3.15%에서 3.44%로 증가한 반면, 민간재원은 0.80%에서 0.20%로 감소했다. 한편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정부재원이 3.47%에서 3.17%로 감소하고, 민간재원은 0.35%에서 0.29%로 줄

며 전체 공교육비도 3.71%에서 3.44%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IV-9] 한국과 OECD의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1998, 2021



주: 1) '정부' 및 '민간'은 2014년(EAG 2017 수록)까지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예: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정부재원으로 포함하는 '초기 재원' 기준 수치, 2015년(EAG 2018 수록)부터는 이전지출을 민간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 수치임.

2) 2015년(EAG 2018 수록)부터 한국 자료의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 중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이 제외되었으며, 2016년(EAG 2019 수록)부터 모든 교육단계에서 제외됨.

3) 2014년(EAG 2017 수록)부터 한국 자료의 교육단계 미분류 프로그램 지출액(주로 행정기관 지출)을 각 교육단계에 포함하여 공교육비를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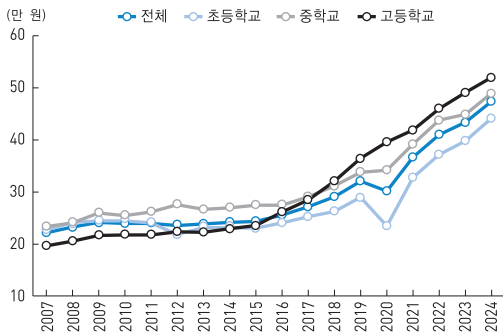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고등교육의 경우, 한국은 정부재원이 1998년 0.44%에서 2021년 0.69%로 증가했으나 OECD



평균(0.99%)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민간재원은 2.07%에서 0.85%로 대폭 감소하여 전체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51%에서 1.55%로 줄어 들었다. 반면, OECD 평균은 고등교육 정부재원이 1.06%에서 0.99%로 다소 감소한 가운데, 민간재원은 오히려 0.29%에서 0.45%로 증가하며 전체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1.33%에서 1.48%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IV-10]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07-2024



주: 1)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됨.
 2)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학생 대상 수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한편, 가계 소비의 일환인 사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공교육비(formal education expenditure)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면상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사교육비 공식 통계인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부터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모든 학교급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 급격한 상승이 관찰된다(그림

IV-10). 전체 평균은 2007년 22.2만 원에서 2024년 47.4만 원으로 약 2.1배 증가하였고(명목 기준), 이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2020년(30.2만 원)을 제외하면, 증가세는 거의 매년 지속되었다.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7만 원에서 2024년 44.2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중학생은 같은 기간 23.4만 원에서 49.0만 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세 학교급 중 고등학교의 사교육비는 2007년에 19.7만 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2024년에는 52.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의 과정

교육·훈련의 과정(process)은 학생의 학습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투입된 자원(input)을 학습 성과(output)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수업, 교수학습 활동, 평가, 학교 운영 등이 교육·훈련 과정의 일환이며, 여기서는 광복 이후 국가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수업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IV-1〉에 제시된 시기별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가 교육과정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점차 체계화·다양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45~1954년 교수요목기에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주주의 이념 주입을 중심으로 한 비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표 IV-1〉 시기별 국가 교육과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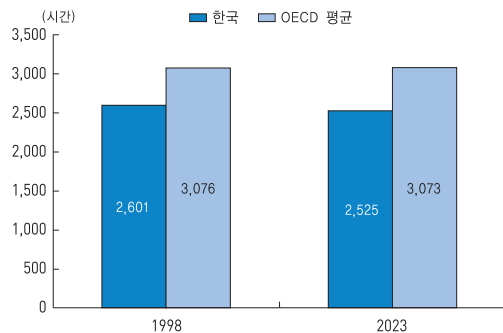
교육과정	시기	주요 내용 및 특징
교수요목기	1945 -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정 아래 일제 잔재를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수요목(어떤 과목에서 가르칠 교수 내용 목록) 제정 및 한글 교과서 편찬, 과목별 주제 계열 중심의 비체계적 교육.
제1차 교육과정	1954 -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보주의와 생활 중심 교육이념 반영, 교과 활동과 특별활동의 이원 체제. 실용교육 강조, 사회생활과 및 실업 교과 신설, 반공·도의 교육 강화.
제2차 교육과정	1963 -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론·각론 체계로 구성된 최초의 종합적 교육과정, 학교 간 연계·교과 통합 강조.
제3차 교육과정	1973 -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신체제 반영, 새마을운동과 반공교육 강조, 실과(기술·가정) 필수화.
제4차 교육과정	1981 -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인교육·민족정신교육·진로교육 강조, 인간상 명시(건강·능력·도덕 등). 초등 저학년 통합교과 도입, 중등은 보통교육 강화. 고등학교는 공통과목 중심 일반교육 강화.
제5차 교육과정	1987 -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개정 원칙, 교육목표는 자주적·창의적·도덕적·건강한 인간 양성. 초등 통합 교육 심화, 지역화 시도, 교과서 수 다양화.
제6차 교육과정	1992 -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화 대응 교육 지향, 교육과정 편성의 분권화 추진. 학교 재량 시간 신설, 열린교육·수행평가 도입, 학습자 중심 교육 강조.
제7차 교육과정	1997 -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별 교육, 선택 중심 교육 강화, 10년간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 활동 신설, 재량활동 확대, 교과 정보화 및 교실 혁신 추진.
2009 개정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군·교과군 도입,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재량·특별활동 통합. 고교 진로 집중 과정 및 집중 이수제 실시.
2015 개정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문·이과 통합,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6대 핵심역량 제시). 학교급별로 한글교육 강화(초 1~2), 자유학기제(중), 선택과목 다양화(고) 등 교육과정 체제 정비.
2022 개정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소양,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전 교과에 반영.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 연계 학기 운영 등을 통해 자기 주도성과 진로 연계 교육 강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 체계 마련.

출처: 교육부(2021.11.24), 홍후조(n.d.).

1차 및 3차 교육과정기에는 생활 중심 교육, 실용교육, 반공교육 등의 가치가 반영되었다. 4차, 5차 교육과정에서는 전인교육과 진로교육, 지역화 및 통합교육 등이 강조되며 교과 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세계화 대응과 분권화를 위한 시도가 본격화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선택 중심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화되었다. 2009 개정 이후에는 학년군·교과군 체계와 진로 중심 고교 교육이 도입되었으며, 2015 개정에서는 핵심역량 중심의 창의융합 교육이 강조되었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진로 연계 교육과 디지털 기반 교육체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연간 총수업시간 지표를 살펴보았다(그림 IV-11). 199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전기중등교육(중학교) 연간 총수업시간은 2,601시간

[그림 IV-11] 한국과 OECD의 전기중등교육(중학교) 연간 총수업시간, 1998, 2023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에서 2,525시간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OECD 평균은 3,076시간에서 3,073시간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한국의 중학교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약 548시간 적은 수준으로, 양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훈련의 산출

교육·훈련의 산출은 교육체제 내에서 투입된 자원이 교육 수행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산출 지표로서 교육 이수, 교육 성과, 사회적 성과 영역의 지표들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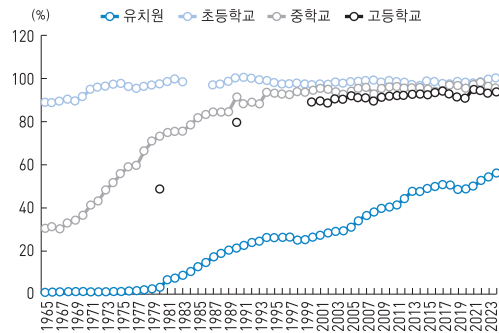
교육 이수

교육 이수에서는 취학률과 진학률을 살펴보았다. 취학률은 해당 연령 또는 학교급의 취학 적령 인구 중 재적학생 수의 비율을 의미하고, 진학률은 해당 학교급의 졸업자 중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IV-12]의 학교급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1965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취학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 1965년 전체 취학률이 0.7%에 불과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56.3%로 높아졌다. 이는 유아교육의 제도화 및 국가적 투자 확대의 결과로 해석된다. 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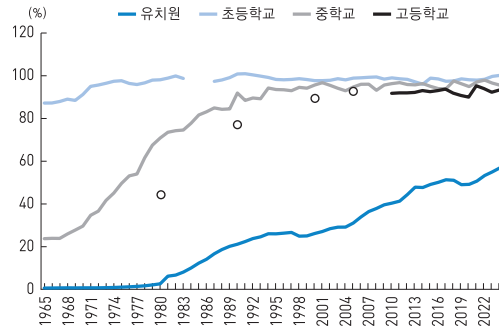
학교는 이미 1970년대에 90%를 넘어서며 조기 보편화를 달성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100% 내외로 유지되며 안정적인 취학률을 보인다. 중학교는 1965년 30.6%였으나 1980년 73.3%, 1990년 91.6%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90% 중후반대의 취학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1980년 48.8%에서 2000년대 중반에 90%대로 진입하여, 2024년에는 93.9%로 상승하였다.

[그림 IV-12] 학교급별 취학률(전체, 여성), 1965~2024

1) 전체 취학률



2) 여성 취학률



주: 1) 분모가 되는 취학연령 인구수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함.

2) 초등학교의 경우 1984~1986년 연령별 학생 수가 집계되지 않음.

3) 취학률(%)=(취학적령의 학생 수/취학적령 인구)*1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한편, 과거에는 전 교육단계에서 여성의 취학률이 남성보다 낮았다. 하지만 중학교는 1980년대 중반, 고등학교는 1990년대 이후 양성 격차가 거의 사라졌으며, 최근에는 남녀 간 취학률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여성이 소폭 높은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13]에 제시된 1965년부터 2024년까지의 학교급별 진학률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현저한 상승세를 보였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은 1965년 54.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95.8%, 2002년 이후로는 매년 100%에 도달하며 완전 진학을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도 1965년 69.1%에서 출발하여 1990년 95.7%, 2000년대 들어서는 99% 이상 수준으로 정착되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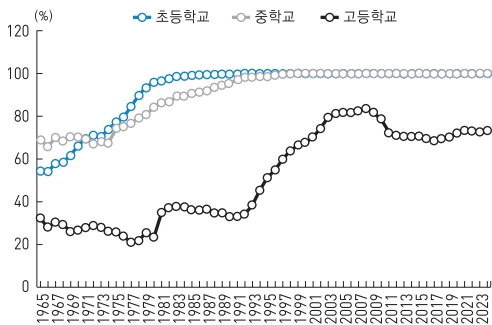
로의 진학률의 경우 1965년에는 32.3% 수준이 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2005년에 82.1%에 도달했고, 2008년에 83.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24년에는 73.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취학률과 진학률 지표를 통해 1960~1980년대에 초·중등교육의 보편화가 달성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도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를 위한 교육 기회의 확대, 사회의 고도화, 학력 중시 사회문화의 심화 등의 제도적·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성과

교육 성과 영역에서는 학업성취도와 문해율 지표를 살펴보았다. [그림 IV-14]에 제시된 2004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3 학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통학력 이상(3 수준 이상) 비율은 2010년대 중반까지 상승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이후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국어의 경우, 2016년에 90.1%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하여 2023년에는 61.2%까지 감소하였다. 다만, 2024년에 다시 66.7%로 상승하였다. 수학은 2016년에 68.2%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4년에는 48.6%를 기록하였다. 영어의 경우 2013년 86.1%에서 2022년 55.9%까지 감소한 뒤 2023~2024년에 60% 초반대까지 소폭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

[그림 IV-13] 학교급별 진학률, 196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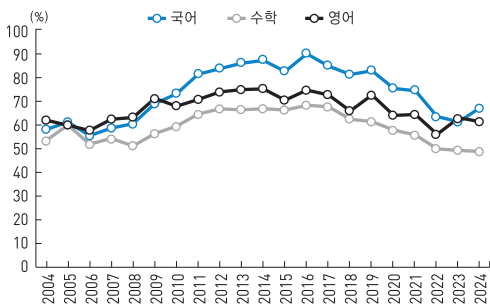
주: 1) 진학률은 해당 학교급의 졸업자 중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고등학교 진학률은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한 자의 비율임.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기타 학교가 포함되며,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 학교가 포함됨. 고등학교 진학자에 특수학교 전공과는 포함되지 않음.
 3) 진학률(%)=(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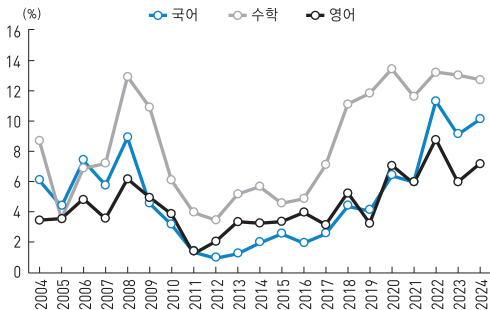
으로 중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2010년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2010년 후반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직후인 2022년까지는 지속해서 하락하였고, 2023년 이후 일부 과목에서 소폭 반등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초학력 미달(1 수준) 비율은 대체로 역방향의 경향을 보이며 증가했다. 특히 수학은 2005년 3.6%에서 2024년 12.7%까지 증가해 기초학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어와 영어 역시 2022년에 각각 11.3%, 8.8%로 증가하

[그림 IV-14] 중3 학생의 교과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성취 수준 비율, 2004-2024

1) 성취도 3 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



2) 성취도 1 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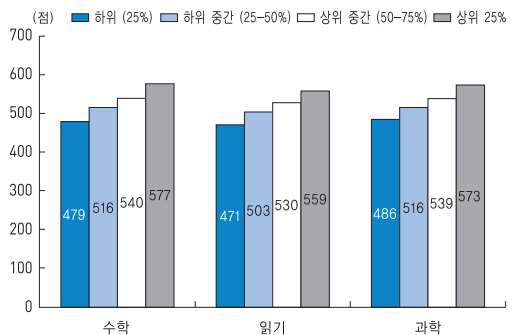


주: 1) 2008년 이전까지는 표집평가, 2008~2016년은 전수평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표집평가로 시행되고 있음.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각 연도.

였으며, 이후 2024년에는 각각 10.1%, 7.2%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은 교육격차의 지속적 심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업결손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격차는 [그림 IV-15]의 2022년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PISA 2022의 학생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ESCS) 분위별 성취 수준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ESCS 분위가 높아질수록 성취 수준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일관되게 관찰된다. 수학의 경우 ESCS 하위 25% 집단의 평균 점수는 479점, 상위 25% 집단의 평균 점수는 577점으로 ESCS 상·하위 집단 간 성취 수준 점수 차이가 98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읽기와

[그림 IV-15] 만 15세 학생의 ESCS 구간별 영역별 성취 수준 평균, 2022



주: 1) ESCS란 부모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지표(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를 의미함. 여기서 ESS는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직업, 가정의 보유 자산 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며 수치가 클수록 ESCS가 높음을 의미함.
출처: OECD, PISA 2022, web table TableI.B1.4.3., Table I.B1.4.4., Table I.B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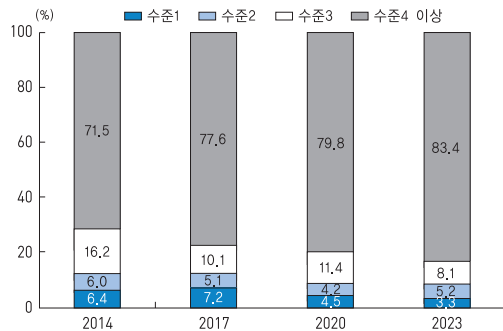
과학에서도 ESCS 상·하위 집단 간 성취 수준 점수 차이가 각각 88점, 87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의 가정 배경과 교육 격차 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특히 수학 영역에서 가정 배경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해율의 경우, 국가기록원(n.d.)에 따르면 광복 직후 남한 지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다. 이는 일제시대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말과 한글의 사용을 금지한 것에 기인한다. 이후 ‘성인교육위원회’와 ‘국민 강습소’의 조직·설치, 초등교육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문맹률은 1948년에 41.3%까지 낮아졌다. 문맹 퇴치의 노력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1954~1959)」과 「문맹퇴치 5개년 계획(1954~1958)」이 수립·시행되며 문맹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문맹률은 1958년에 4.1%로 격감했다(국가기록원, n.d.). 이후에도 관련 통계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데, 1966년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문해실태조사에서는 비문해율이 8.9%로 조사되었다. 또한, 1977년에는 의무교육 취학률이 97%에 달해 이후에는 공식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김순임, 2009).

국가 수준에서 문해력이 다시 조사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 성인문해조사가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이때부터 문해는 과거의 “문자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닌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 해독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으로 정의되어 측정되었다(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2024, p. 5). 또한, 문해력을 측정할 때 문해자와 비문해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문해 능력을 4단계로 나누어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그림 IV-16]에 제시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가진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장 높은 문해력 범주인 ‘수준 4 이상’ 비율은 2014년 71.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83.4%에 이르렀다. 반면, ‘수준 1’에 해당하는 낮은 문해력 비율은

[그림 IV-16] 문해 능력 수준별 성인 비율, 2014~2023



주: 1) 성인문해능력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문해 능력 수준 구분
 - 수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 수준 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미흡한 수준
 - 수준 3: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미흡한 수준
 - 수준 4 이상: 일상생활에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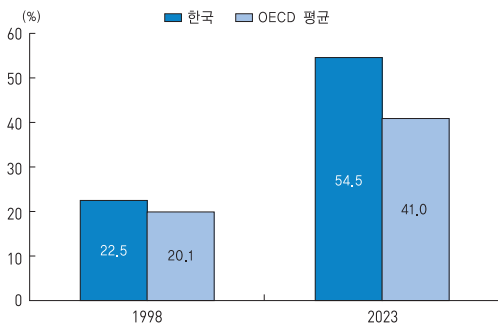


2017년에 7.2%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23년에는 3.3%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사회적 성과

마지막으로 사회적 성과로는 성인(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그림 IV-17). 199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2.5%에서 54.5%로 32.0%p 증가하며, OECD 평균 증가 폭(20.1% → 41.0%, 20.9%p)을 크게 상회하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한국은 OECD 평균보다 13.5%p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상승을 반영하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점은 한국 사회에서 학력 중심 문화와 노동시장에서 학위의 가치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V-17] 한국과 OECD의 고등교육 이수율, 1998, 2023



주: 1)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나가며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교육·훈련 체제가 광복 이후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이뤄온 과정을 보여준다.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 사회를 거치며 우리 교육은 단지 학령인구의 수용이나 학교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지속적 개선, 교원의 학력 수준 향상, 공교육비 확대 등 교육 여건 전반의 질을 높여왔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보편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한국 사회가 지식 기반 경제로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동시에 국가 교육과정의 점진적 체계화와 다양화는 교육 내용의 시대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고교학점제와 디지털 기반 교육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성장 도구를 넘어 국가 발전의 전략 자산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몇 가지 구조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재정 간의 불균형 등 교육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경쟁사회의 심화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한 사교육 의존 확대는 교육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격차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및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에서 드러난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증가 현상은 교육 투입 대비 산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국면이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훈련 체제는 학습자의 다양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공교육 내실화,

교육격차 해소, 교육재정 체계 재설계 등 한층 정교하고 균형 잡힌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축이며, 향후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1.11.24.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 2024. 「2023년 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
- 국가기록원. n.d. 「문맹퇴치사업(1954년)」. <https://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business.do> (2025.06.10. 인출)
- 김순임. 2009. 「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개요」. 새국어생활, 19(2), 17-32.
- 이종재, 돈 아담스, 김성열, 김성기, 정제영, 조난심, 김왕준. 2009. 「한국교육 60년: 성취와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홍후조. n.d. 「교육과정(教育課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5530> (2025.06.02. 인출)
- United Nations. (2024).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